

농어촌공사, 청년 스마트팜 사업 돕는다

부자·시설 제공 '비축농지 임대형' 부지만 지원 '청년창업형' 대표적 맞춤 지원으로 영농 창업 활성화 올해 예산·사업대상지 확대 예정

세종=안용성 기자

농촌의 일손 부족, 기후변화 등에 맞설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각광받는다. 특히 농촌에서 영농을 꿈꾸거나 농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팜 영농을 하려면 농지 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 등 초기 투입 비용이 적지 않다. 실제로 농지 구매 비용을 빼고 1500평 규모의 농지에 배수·전기시설 등을 조성한 뒤 400평 규모의 내재해형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데 5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청년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액수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층의 스마트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나서고 있다.

26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부터 청년 농업인의 수요에 맞춘 스



상주스마트팜

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팜 영농창업을 위해 자가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농업단지 사업'과 스마트팜 시설 설치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을 상대로 부지와 스마트팜 시설까지 지원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사업'이 대표적이다.

먼저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는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공사가 매입한 뒤 스마트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반까지 정비해 선임대·후매도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 54억원을 투입해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2개소에 7.7ha 규모로 단지 조성을 마쳤다. 선정된 청년 농업인은 올해부터 기반이 정비된 농지에 온실 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을 통해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청년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작년 예산 45억원을 편성, 10개 농가 선정을 완료하고 충북 음성과 전북 군산, 경북 상주 등 총 5ha에 개소당 0.13ha 규모로 연동형 온실 설치를 추진했다.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를 이용하면 초기 투자비용 없이 표준임차료의 50% 수준에서 농지를 빌릴 수 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표준임차료의 50% 수준의 농지 임차료에 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분의 1가량인 시설 임차료를 더한 비용만 있다면 시설 영농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올해 들어 두 개 사업의 예산과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사업에는 예산 300억원이 편성돼 2개소 이상으로 사업 대상지가 확대됐다. 공사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에 예산 60억원을 편성하고 전년 대비 2개소를 늘린 12개 농가를 상대로 스마트팜 시설 영농을 지원할 예정이다.